

[토론회 자료집]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5년 10월 12일 (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

주관 :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 회 사

국회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한을 정해놓고 조속한 비준처리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한중 FTA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것이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FTA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정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급한 발효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정문은 식품위생조치 중국 현지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식품의 유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 김치가 물밀 듯이 수입되어 우리 김치시장을 위협하는데 정작 우리 김치는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책은 FTA

국회비준 때마다 나오지만, 임시적인 땀질식 처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한-호주 FTA 비준 동의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방안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해놓고도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한중 FTA를 단독 상정하며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중FTA를 체결하면서 수입액기준으로 60%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연간 고작 77억 달러(20년간 1,540억원) 피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볼 때 정부의 피해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직·간접 피해와 2차 3차 피해까지 꼼꼼히 따져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분석 결과가 과소평가되다보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매우 부실합니다. 정부는 한중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완대책도 적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중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1.34억 달러 증가가 전망되고, 20년간 농업생산액 누적 피해액(2016~2035년)은 10조 3,825억원(연평균 5,1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농어업국가이고 우리와 동일한 작물과 어류가 동일한 계절에 생산되고 있고, 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 농어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FTA가 체결되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 농어업의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16년 농업관련 예산은 19조 3,165억원으로 '15년 대비 고작 100억원(0.1%)이 증가했습니다. 농업예산은 매년 국가전체예산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6년 예산에서도 국가전체예산증가율 3.0% 수준은커녕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동안 FTA비준시 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은 29조 9,782억원이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 식” 숫자놀음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FTA는 각 상임위 검토를 거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협정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서울대 임정빈 교수님, 한농연 유근준 대외협력부회장님, 한수연 임정수님, 윤태진 수석전문위원님과 농식품부 조재호 농정국장님, 해수부 서장우 수산정책관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 장 김 진 필



먼저 국정운영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영록 의원님과 토론회 주관을 함께 해주시는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님과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님, 그리고 토론자로 자리해주시는 모든 패널 여러분들과 오늘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2015년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약 1,450억원이 증가하고 연간 5,200억원 상당의 농업생산액 감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로 인해 마늘, 건고추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의 교란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현재도 중국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면, 마땅히 농업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계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원론적인 내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고작 0.1%에 그쳐 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보완대책을 내세운 정부의 농림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중 FTA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이번달에 구성하여 대책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분석을 꼼꼼히 하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토론회 개최 후 도출되는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 토론회 개요 ■	9
------------------	---

■ 발제문 1 ■

‘한중 FTA 농업분야 예상피해와 국내보완대책’	11
----------------------------------	----

■ 발제문 2 ■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23
----------------------------------	----

■ 패널 토론문 ■	37
------------------	----

■ 메모장 ■	76
---------------	----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토론회 개최 취지

-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었음
- 이에 국회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10월에 구성하고 한·중FTA 체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작부체계가 비슷하여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산업은 특히 영세한 어업인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연안 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앞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FTA 농수산업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
- 주관 :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3.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안)

이름	소속 및 직책	비 고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편집국장	좌 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장	발표 1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발표 2
임정빈	서울대학교/교수	지정토론 1
유근준	한농연중앙연합회/대외협력부회장	지정토론 2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지정토론 3
윤태진	새정치민주연합/수석전문위원	지정토론 4

※ 구체적인 토론회 진행 계획이나 주제발표자·지정토론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토론회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까지	소요		
10.12(월)	분		
13:30~13:35	5	내빈 소개	사회자
13:35~14:45	10	개회사 및 인사말	국회의원 김영록 김진필 회장(한농연)
13:45~14:00	15	내빈 축사	
14:00~14:30	30	발표1 : 한중 FTA 농업분야 예상피해와 국내보완대책 발표2 :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정국장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 임정빈(서울대학교 교수)
14:30~15:10	40	지정토론 (각 10분)	유근준(한농연 대외협력부회장) 임정수(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윤태진(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
15:10~15:20	10	질의응답	참석자(질의 및 응답)
15:20~15:30	10	정리 및 폐회	

한중 FTA 농업분야 예상피해와 국내보완대책

2015. 10. 1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1

추진 경과

- 한·중 민간공동연구('05~'06) 및 산관학 공동연구('07~'10.5) 완료
- '12.1.9 한·중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
 - * (국내절차) 한중 FTA 공청회('12.2.24), FTA 추진위원회('12.4.13), 대외경제장관회의('12.4.16), 국회보고('12.4.23) 등 진행
 - * (대외절차) 중국과 협상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12.3~4월)
- '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 발표
 - * 단계별 협상, 상품분야 초민감/민감/일반품목군 설치, 역외가공지역 등 포함
-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하였고, 제7차 협상('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
 -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물협력, SPS)의 모델리티 합의
-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 도출
 - * 8차('13.11, 인천), 9차('14.1, 시안), 10차('14.3, 고양), 11차('14.5, 메이산), 12차('14.7, 대구), 13차('14.9, 북경)
-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가서명 완료('15.2.25) 및 정식서명(6.1)을 거쳐, 영향평가분석('15.5월) 결과 및 국내산업 보완대책과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6.4)
- 농해수위 현안보고(6.16일) 및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 상정(8.31일)

2

한중 FTA 농산물 양허 결과

가. 우리측 양허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양허제외/TRQ/부분감축

◆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 체결 FTA를 상회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 (초민감품목) 초민감품목 581개 중 548개(94.3%)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으로 합의

○ (양허제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 (미국) 1.0%(16개), (EU) 2.8%(41개), (호주) 10.5%(158개), (캐나다) 14.1%(211개)

○ (TRQ) 이미 WTO/TRQ를 통해 對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팔 3, 기타사료 38, 맥아 5

○ (부분감축) 對中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 최소화

* 관세 부분감축(평균 20%) 품목 :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팔, 기타 당, 전분용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 기타 과실견과(관세 45%)·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철폐

□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 한·중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소(번식용), 오리(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기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파(기타), 아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아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코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용),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안(신선), 구아바(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팜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림,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 철폐	11년차 부터 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부터 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선형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현행 관세+TRQ		7	0.4	참깨, 팔(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1% 부분감축	3	0.2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10% 부분감축	8	0.5	팔(탈각/조제),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기타/조제), 송이버섯(냉동), 기타채소(조제)
	1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품), 암-디오스코레이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협정 배제		16	0.99	쌀(멥쌀, 찰쌀, 벼, 쌀가루 등)
양허 제외		532	33.0	보리(겉보리/쌀보리), 팜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 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나. 중국측 양허

-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양허제외
 - 나머지 1,029 품목(91%)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 (민감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내 관세 철폐
 -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등도 대부분 20년내 관세 철폐
- (일반품목)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신선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 철폐

<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5년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계		304	26.9	
초민감 품목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밭농업·임업을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총 1,540억원, 연평균 77억원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
- 부문별로는 재배업 920억원(연 46억원), 임업 582억원(연 29억원),
축산업 38억원(연 2억원) 규모의 생산액 감소 예상

<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액 >

(단위 : 억원)

구 분		연평균	20년 누적
재배	곡물류	6	121
	채소류	21	430
	과실류	4	71
	특약용, 기타	15	298
	소계	46	920
축산	양잠산물 등 기타	2	38
	소계	2	38
임업	목재류	15	308
	건조 고사리	4	85
	냉동 송이버섯	1	20
	목이버섯	3	60
	기타 산림수	3	59
	죽순	0.5	9
	기타	2	41
	소계	29	582
합 계		77	1,540

4

개방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

□ (FTA 확대) FTA 미체결국과의 협상이 지속 추진되고, 세계적 추세인 거대 FTA 체결의 영향력도 더욱 거세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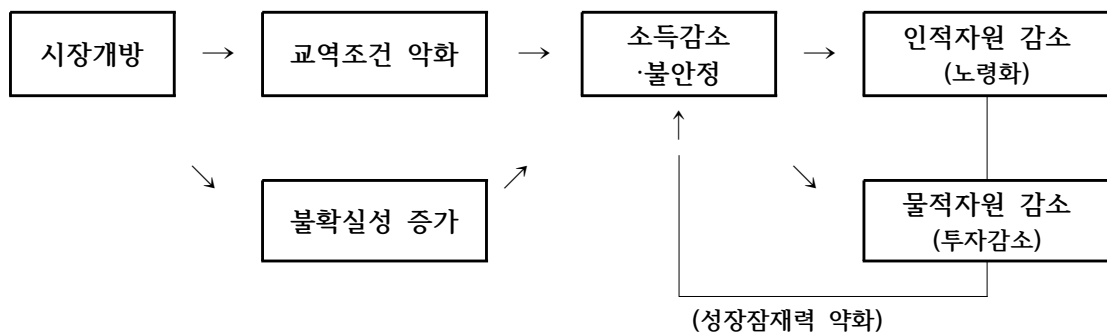
○ 쌀 이외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는 한·미 FTA나 개방 폭이 큰 한·EU FTA 등의 영향은 점점 가중될 것

* 한미 FTA는 발효 4년차('12.3월 발효), 한EU FTA는 발효 5년차('11.7월 발효)

⇒ 기 체결 FTA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FTA 체결도 확대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방확대로 교역조건 악화, 소득감소, 투자 축소 및 성장잠재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 경영안정 장치 보강, 신규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



□ (미래성장산업화) FTA 확대로 마련된 개방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을 노후산업에서 미래성장 주도산업으로 변화

○ 농가 규모화를 넘어선 공동경영체·주산지 육성, ICT 첨단기술 활용, 전후방 연계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전업농·중소농·영세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 융복합, R&D, 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혁신 활동 조장

□ (기존 대책과의 조화·발전) FTA체결국별·품목별 피해대응의 한계를 보완·내실화함으로써 농업·농촌 전반의 개선을 도모

○ 한·미, 한·EU FTA의 성과 평가를 기초로 지속적인 보완·발전 추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 농정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장기반 및 수출 확대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화/규모화 ② ICT 융복합/R&D ③ 6차산업화/농촌관광 ④ 유통개선/수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환경/안전 농식품 ② 고부가 식품외식 산업 육성 ③ 수출 확대 ④ 기업과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과 경영 안정 ② 영세고령농 배려 ③ 정주여건 개선

정책 이 표 라	인력 육성	직업교육, 창업지원, 귀농·귀촌
	금융 등 개선	정책금리 합리화, 세제 지원, 농신보 개선
	추진체계	품목·업종별 맞춤형 정책

+

FTA 피해보완 대책
<p>피해보전 : 발농업,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p> <p>FTA활용 :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애로 해소 등 수출확대</p> <p>제도개선 :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 인하, 검역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p>

<p>경제혁신 3개년 계획 : 향후 30년의 성장</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p>
--

- ◆ 피해분야에 대해 영향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완대책 마련
- ◆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강구

1. FTA 보완 대책

- (피해보전) 피해가 예상되는 밭농업·임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경영 안정장치를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투융자 1,495억원)
 - (밭농업) 기계화*, 공동경영체(100개소) 육성 등을 통해 영세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확대 추진(투융자 1,165억원)
 - * 일관기계화(파종준비~수확) 지원 연 20개소, 임대사업소 확충(336개소→820)
 - (임업) 단기임산물·목재 전문생산단지 구축 등 규모화, 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및 임산물 유통 효율화 추진(투융자 330억원)
 - * 작물생산단지/목재산업시설현대화(누적) : ('15) 225개소/30개소 → ('25) 365/540
- (FTA 활용)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조사,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종합 컨설팅 및 홍보·전시 강화 등 추진(투융자 60억원)
- (검역·원산지) 검역장비 확충 및 상시 감시망 구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16개→20)(투융자 40억원)
- (무역이득공유제·피해보전직불제) 한·영연방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논의

참고

한중 FTA 국내대책 투융자 계획

□ (총 지원규모) 한·중 FTA에 따른 피해분야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10년간('16~'25년) 총 1,595억원 지원

○ (발농업 경쟁력 제고) 밭 공동경영체 육성·농기계 임대, 농업수입 보장보험 사업 등(1,165억원)

○ (임업경쟁력 제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임산물 수출촉진 등(330억원)

○ (수출 강화) 해외홍보마케팅 및 해외수출정보조사 등(60억원)

○ (검역검사 강화) 동축산물·식물 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등(40억원)

□ 투융자 계획('16~'25년)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투융자 계획('16~'25)		
		기 존	조 정	증 감*
한·중 FTA 대책	소계	13,950	15,545	1,595
	밭 공동경영체 육성	-	465	465
	농기계 임대	2,200	2,600	400
	농업수입보장보험	320	620	300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5,007	5,107	100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300	510	210
	임산물 수출	573	593	20
	수출기반 강화	3,600	3,660	60
	동축산물 검역검사	920	940	20
	식물 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030	1,050	20

* '15년 예산 대비 10년간 순증되는 예산 규모임

** 한·중 FTA 발농업 대책은 한·베트남 FTA의 발농업 영향까지 포함하여 마련

2. 개방 대응 미래성장산업화 대책(투융자계획은 '16년부터 연도별 예산에 반영)

- (경쟁력 제고)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스마트팜 보급 및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창출
 - 주산지·들녘 단위 공동경영체 활성화,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산 및 수급안정대책 적기추진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 스마트 팜 확산으로 新부가가치 창출, R&D 강화 및 사업화율 제고
 - 지역 내 부존자원과 제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외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수출 확대)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고품질 안전 농식품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추진
 - 친환경 단지 육성 및 인증 강화,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GAP·HACCP 확산 등을 통해 농식품 품질과 안전성 제고
 - 김치산업 육성, 장류 등 수출 전략상품 개발, 대규모 가공원료 생산단지 조성 및 산지-외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컨설팅 및 홍보 강화
 - 중국 내 물류체계 구축, 농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 통관애로 및 SPS(검역·위생기준) 장벽 해소 지원 강화
- (삶의질·복지) 소득불안정 대응장치를 강화하고, 배려농정 확대
 - 밭직불제,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해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추진
- (정책 인프라 강화)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력 육성, 금융·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과학·기술농업 주도를 위한 핵심인력 육성*,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금리 인하 및 세제 지원 등 추진

* 농고·농대 실습중심 개편, 기존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지원 등 젊은 인력 유입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대책 토론회
(’15. 10. 12,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2015. 10.





목 차



I. 추진 배경	26
II. 신규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27
1. 협상 결과	27
2. 영향분석 결과	28
III. 개방시대 대응전략	29
IV. FTA 국내 보완대책	30
1. 피해지원 대책	30
2. FTA 활용 대책	33
V. 투융자 계획	35

I . 추진 배경

□ 수산물 전면 개방시대 진입

-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3개국과 FTA가 체결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의 70%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진입

* FTA 체결국 수입 비중('14) : 중국·베트남 등 타결 전 약 44% → 타결 후 약 71%

-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수산분야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 수입 현황('14) : (중국) 1위, 11억 달러, (베트남) 3위, 6억 달러 ... (뉴지) 25위, 1800만 달러

□ 수산업·어촌의 정체 심화

- 환경오염과 자원남획으로 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연재해와 질병에 취약하여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

* 어업 생산량(천톤) : ('90) 1,472 → ('00) 1,189 → ('10) 1,133 → ('14) 1,060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인해 어촌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어가 소득, 어업경영 여건 등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세

* 어가인구(천명) : ('00) 251 → ('05) 221 → ('14) 141 / 고령화율(%) : ('00) 12.2 → ('05) 18.8 → ('14) 32.2

□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필요

- 우리 수산업은 단순 생산·가공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유통·가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 국내 수산물 수요는 정체되어 있으나 FTA로 인해 해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활성화가 시급

⇒ 최근 체결된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별도 추진

Ⅱ. 신규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1 협상 결과

□ 한·중 FTA 협상 결과

- (한국) 629개 품목 중 542개의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며, 對中 수입액 기준⁽¹²⁾으로는 35.7%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개방되는 품목은 10년 내 철폐되는 일반 품목(수입액 0.2%)과 20년 내 철폐되는 민감품목(수입액 35.5%)으로 구성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초민감품목군은 ①양허제외(수입액 30.4%), ②TRQ(수입액 29.2%), ③부분감축(수입액 4.7%)으로 구성
- (중국) 338개 품목 중 335개의 관세가 20년 동안 철폐되며, 對韓 수입액 기준⁽¹²⁾으로는 20년 내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한·베 FTA 협상 결과

- (한국) 한·아세안 FTA 민감·초민감품목 190개 중 77개에 대해 추가 개방하여 12.2%p(품목수) / 6.6%p(수입액) 추가 자유화
 - * 품목수 : (한-아세안) 69.8% → (한-베) 82.0 / 수입액 : (한-아세안) 55.3% → (한-베) 61.9
- (베트남) 한·아세안 FTA를 통해 모든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2018년까지 100% 관세 철폐

□ 한·뉴 FTA 협상 결과

- (한국) 우리나라는 450개 품목에 대해 품목수 99.1%, 수입액 47.1%를 개방하여, 기존의 영연방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
 - * (한-호) 품목수 99.1% / 수입액 91.2%, (한-캐) 품목수 100% / 수입액 100%
- (뉴질랜드) 모든 수산물(173개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 철폐

2 영향분석 결과

- **[한·중 FTA]**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 간 국내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총 2,080억원으로 전망(연평균 104억원)
 - 주로 영세한 업종인 연안어업(연 64억원)과 내수면어업(연 11억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금에 대한 피해도 발생(연 8.3억원)
- **[한·베 FTA]** 한·베 FTA 발효시, 향후 15년 간 국내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총 810억원으로 전망(연평균 54억원)
 - 연안(연 22억원)과 해면양식(연 17억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한·뉴 FTA]** 한·뉴 FTA 발효시, 향후 15년 간 국내 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총 311억원으로 전망(연평균 21억원)
 - 해면양식(연 8억원)과 내수면(연 4.4억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FTA별 생산액 감소 추정액 >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연안어업	근해어업	해면양식	내수면	원양어업	소금
중 국	2,080	1,273	20	318	223	81	165
베트남	810	334	143	250	36	47	-
뉴질랜드	311	53	41	130	65	22	-
합 계	3,201	1,660	204	698	324	150	165

⇒ 모든 생산 업종에서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영세한 어업인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연안 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Ⅲ. 개방시대 대응전략

비 전 수산업을 어업인과 함께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목표

- ◆ 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
- ◆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

추진 과제

< 피해지원 대책 >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 수산정책보험 내실화

어선어업 분야 지원

- ▶ 연안 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 ▶ 소형 어선에 대한 지원 확대
- ▶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기반 마련

양식어업 분야 지원

- ▶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 ▶ 양식 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 취약분야 생산·유통 시설 특화 지원

< FTA 활용 대책 >

해외시장 개척 확대

- ▶ 수출 지원기반 확충
- ▶ 중국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 ▶ 중소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가공유통 인프라 조성

- ▶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
- ▶ 수산물 유통 자동화 설비 도입
- ▶ 수산가공식품 육성 기반 확충

IV. FTA 국내 보완대책

1 피해지원 대책

(1) 어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어촌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영세한 마을*·신고어업 종사자와 양식 산업의 기반인 종묘생산 어업인에 대하여 정책자금 금리 인하(3→2%)

*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1,992개소) 및 지구별수협(70)에 한해 면허

- 재해, 적조,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융자, 금리 1.8%, 1년 상환)

□ 수산정책보험 내실화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 제고

* 품목 : ('15) 21개 → ('17) 27 → ('25) 35 / 가입 어가 : ('15) 3,250 → ('17) 4,500

- 시장여건 변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어가 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 ('16) 도입방안 마련 → ('17~'18) DB구축 및 도상연습 → ('19) 시범사업 추진

- 정책보험, 정책자금 등 지원 시 소득·경영 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추진('15, 50% → '19, 100%)

[2] 어선어업 분야 지원

□ 연안 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 연안 어업은 절대 다수 어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조직화가 어려우며, FTA 최대 피해분야로서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연안 어업과 근해 어업의 규모 비교('13) >

구 분	어가인구	어선척수	생산량	척당 어업이익
연안어업	83%(88천명)	94%(44,713척)	27%(28만톤)	17.5백만원
근해어업	17%(18천명)	6%(2,780척)	73%(76만톤)	139.7백만원

- 연안 어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과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

* 낙지, 오징어, 새우 등 피해품목 중심 ('16) 3개 품목 → ('17) 5개 → ('19~) 10개

- ① 홍보·마케팅을 통한 품목별 단체 조직화 → ② 경영·자원관리 컨설팅 실시 → ③ 자조금* 조성 및 정부 1:1 매칭 출연

* 생산자들이 능동적으로 수급조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거출하여 조성

□ 소형 어선 지원 확대

-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어선 개량 사업 확대

- 노후 기관·장비 교체(1,070척), 전기 추진기 보급(31척), LED燈 보급(65척) 등을 지원하여 어선 어업의 경비 절감을 지원

-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세한 어업인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한·미 FTA 대책)

□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기반 마련

- 중국 불법어업이 심각한 해역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어업지도선의 노후한 단속정 승·하강 장치(데비트) 교체를 지원(~'18)

* 국가 어업지도선 34척 중 노후한 데비트 미교체 선박 18척 대상

- 서해 5도, 이어도 등 연근해 특정해역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통합어업정보시스템 구축

[3] 양식어업 분야 지원

□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 친환경 인증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에 증가하는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친환경 양식 육성

* 농업분야는 '99년부터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하여 지원 중

- 조건불리 직불제 이후 수산분야 두 번째로 도입되는 직불제로서, 친환경 인증제 내실화 방안 마련 등 기반 구축부터 추진

* ('16~'17) 기반 구축 등 연구용역 → ('18~)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 양식 어업인 지원 강화

-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국산 양식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질병을 저감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도모

* 미생물을 이용하여 양식수 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Biofloc 양식 기술 등

- 육상 양식장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을 도입을 확대하여 유류, 전기료 등 저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지원

*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도입방안도 마련('16~'17)

- 양식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비 촉진,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여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확대

* 수출 품목(확대) : 김, 광어, 전복 등 3개 품목, 각 2억원 추가

내수면 품목(확대) : 민물장어, 메기, 송어, 자라, 향어 등 5개 품목, 각 1억원 추가

피해 품목(신규) : 새우, 홍합, 바지락, 미꾸라지 등 4개 품목, 각 1억원 지원

□ 취약분야 특화 지원

- (내수면) 對중국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면 품목을 수입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주요 소비지에 유통판매센터 건립('16~'18, 1개소)

* 중국 내수면 생산량(28,816천톤)은 한국 생산량(28천톤)대비 1,029배

- (소금산업) 영세 천일염 생산어가에 생산 자동화 설비를 지원(~'18) 하여 영세한 천일염 생산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경비를 절감

(1)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지원기반 확충

-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상해, 청도)하고, 단기 홍보매장인 수산물 앵커숍(6→10회)을 확대
- 해외시장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 운영('15~)
 - * 수출지원 기관인 Kotra, aT 등과 연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한 현지 생산~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시장정보 통합 제공
- 주요 해외 소비지에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선 수산물의 해외 유통기반 확보

□ 중국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 對中 특화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중국 내 찾아가는 박람회 (K-seafood fair) 개최(4회) 및 재외공관 연계 홍보 등 통합마케팅 추진
- 급증하는 요우커* 공략을 위해 크루즈터미널 등 국내 주요 관광지 (부산·제주·인천·명동 등)에 수산식품 홍보매장 개설('16. 3개소)

* 요우커 추이 : ('11) 187만명 → ('12) 220 → ('13) 430 → ('14) 610

□ 중소 수출업체의 역량 강화

-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중국라벨 제작·등록, 수출자 등록 등 수출통관 지원 및 수출 애로사항 해소
- 수출 유망상품, 간편식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수출역량 진단을 추진하는 등 중소 수출업체 육성기반 마련

[2] 가공·유통 인프라 조성

□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원산지 단속인력 확충 및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15) 9개 → ('17) 12개

** 40개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 판별기술 실용화 추진

- FTA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중점 추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지원

* 이력제 중점관리품목 확대 : ('15) 12 → ('17) 20 → ('20) 25

□ 수산물 유통 자동화 설비 도입

- 수산물 유통 시 상온에 노출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자동화 설비 도입
-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 거점 유통센터(FPC)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 수산가공식품 육성 기반 확충

-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하여 영세한 생산·가공업체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
- 가공업체들이 거점단지를 활용하여 수산식품 개발, 상품화 등 공동 연구·개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단지 운영을 내실화

*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지원

V. 투융자 계획

□ 10년 간 투융자계획

- 향후 10년 간('16~'25년), 20개 사업에 대하여 기존 재정계획 대비 3,188억원을 추가 지원

구분	사 업 명		형 태	투융자계획('16~'25)		
				기존	최종	증감
피해 지원 대책	< 소 계 >			9,012	11,259	2,247
	소득· 경영 안전망	▪ 어촌공동체,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융자	186	286	100
		▪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58	92	34
		▪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보조	2,870	3,270	400
		▪ 어업경영체등록	보조	140	280	140
	어선 어업	▪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보조	-	172	172
		▪ 노후어선 부분개량	보조	410	720	310
		▪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보조	596	700	104
		▪ 중국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보조	-	90	90
		▪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보조	-	132	132
	양식 어업	▪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보조	-	146	146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	2,840	2,940	100
		▪ 친환경에너지보급	보조	1,510	1,710	200
		▪ 수산물자조금지원	보조	250	400	150
		▪ 내수면 양식 지원(유통판매센터)	보조	152	252	100
		▪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보조	-	69	69
FTA 활용 대책	< 소 계 >			3,610	4,551	941
	수출 확대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보조	1,330	1,764	434
	가공· 유통 인프라	▪ 수산물원산지관리	보조	340	600	260
		▪ 수산물이력제	보조	390	400	10
		▪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보조	-	101	101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보조	1,550	1,686	136
<투융자 총규모>				12,622	15,810	3,188

패널자 토론문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전략

임 정 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전략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중 양국이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이 2015년 6월 1일 이루어짐에 따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나 빠르면 2015년 연내 혹은 2016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전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EU, 중국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다. 앞으로 양국 간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이 2015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면,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나 빠르면 2015년 연내 발효가 예상된다.

그런데 한-중 FTA가 2012년 5월 협상 선언 이후 30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근본적 이유는 양국이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국내수용 능력 증대와 FTA 협상 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한-중 양국은 FTA 협상 선언과 함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1단계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핵심쟁점인 상품분야에서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 세 가지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일반 품목은 FTA 발효 뒤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고,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없애되 초민감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큰 틀의 협상방식에 합의한 후 2단계 협상을 통해 품목별 양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FTA 협상시작과 함께 개별상품의 양허 수준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의 민감분야를 보호할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 빠른 협상타결을 유도하게 한 주요 요인이다. 그 후 양국은 1단계 협상의 합의 틀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2단계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식 품목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중 FTA 협상에서 합의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방 양허수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은 이전에 체결된 한-미, 한-EU 등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측은 핵심쟁점인 농산물 분야에서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 세 가지로 나누고,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자유화 수준을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에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1,611개) 중 10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589개(36.6%), 10년초과 20년내 관세철폐 품목인 민감품목은 441개(27.4%), 그리고 양허제외 등 관세철폐의 예외조치를 적용받는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로 합의되었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5%(1,022개)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중장기적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 많다. 특히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581개중 548개(94.3%) 대해 양허제외, 7개(1.2%) 품목에 대해 TRQ제공 후 관세철폐 예외, 26개(4.5%) 품목에 대해 관세부분감축으로 합의되어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개방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인삼 등 특작류 등이 양허제외 되었다. 이로 인해 협정에서 제외된 쌀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의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농산물 대비 양허제외 품목 수와 비중(548개, 34%)은 기존 미국(16개, 1.0%), EU(41개, 2.8%), 호주(158개, 10.5%), 캐나다(211개, 14.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1>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양허 결과

양허 유형		세 번 수	비 중 (%)	주요 품 목
즉시 철폐		216	13.4	쇠육우/젓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시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묘(기타/탈지), 박류(밀, 등
5년 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낙, 흰포도주(기타),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 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 철폐	11년차 부터 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부터 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선형 철폐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 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 계		441	27.4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평균 20% 부분감축	11	0.7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 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양허 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팥콩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텐저린/오렌지), 사과 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소 계		581	36.1	
총 합 계		1,611	10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리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도 한국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정 물량의 수입이 무관세로 허용되는 대두, 참깨, 팥 등 발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품목들은 이미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WTO 협정이행 차원에서 낮은 관세로 일정물량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품목들이다. 한-중 FTA에서 품목별 현행관세가 유지되나 일정물량이 무관세로 수입 허용되는 관세할당(TRQ) 품목은 대두(10천톤), 참깨(24천톤), 고구마전분(5천톤), 팥(3천톤), 기타사료(38천톤), 맥아(5천톤) 등 7개이다. 또한 관세가 부분적으로 감축되는 김치, 당면, 조제땅콩, 조제 팥, 그리고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열대과실과 한약재 등도 중국산으로의 소비대체 효과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농식품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다른 것을 많이 먹으면 국내산 농식품의 수요감소로 이

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기후대의 큰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저렴한 노동 및 토지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액이 2009년 약 5.7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이 같은 기간 동안 36.8억 달러에서 59.6억 달러로 증가하여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009년 약 31억 달러에서 2014년 약 4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현재도 한·중 농산물 교역은 전적으로 한국의 수입구조라 할 수 있다.

<표 2> 한-중 양국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국가전체	86,70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145,288
	농림축수산물	565	787	1,380	1,278	1,318	1,296
수 입	국가전체	54,246	71,574	86,432	80,785	83,053	90,082
	농림축수산물	3,676	4,323	5,250	5,297	5,739	5,959
무역수지	국가전체	32,457	45,264	47,753	53,538	62,816	55,206
	농림축수산물	△3,111	△3,536	△4,060	△4,018	△4,421	△4,6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통계(2014)

전체 농산물 중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농업부문을 상당히 보호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한-중 FTA는 한국 농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한-중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에서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개방수준의 FTA라 할지라도 중국과의 FTA 타결은 한국 농업에 큰 위협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중 FTA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피해 보전대책을 포함하여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국간 FTA체결로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그리고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계의 위기감과 우려를 줄여줘야 한다.

우선 조만간 이루어질 한·중 FTA 협정 발효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 등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FTA 협정 체결시마다 피해를 보는 품목별로 보상을 해주는 대책마련을 지양하고,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단계적으로 국가 농정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포괄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개방피해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농업 피해지원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이후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는 불가피하게 한국 농업부문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무엇보다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과 동시에 품질이나 유통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유통효율화가 요구된다. 실제 우리 농업여건에서 가격경쟁력 증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 및 유통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아울러 한-중 FTA 체결은 상대국인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농기계, 사료 및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 세계 주요 농식품 수입시장으로 부상 중이고, 우리나라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나라로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농식품 수입국으로 2004년 이후 농식품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 증가,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증대는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모쪼록 한-중 FTA 타결이 우리 농업의 체질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FTA 대책 관련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사항

유 근 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정토론문)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대책 관련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사항

유근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1. 들어가며 : 정부의 FTA 농업 피해대책의 문제점

- 정부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대책을 통해 농업 분야의 체질 강화와 미래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정부는 FTA 발효 후 20년 간 농업 부문 생산감소액이 2,245억원이 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총 2,259억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나왔듯이, 중국과의 FTA로 관세 감축이 없어도 농산물 수입 피해가 20년간 10조 3,8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농민신문 8월 19일 1면 보도), 정부가 발표한 FTA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이 명백함
 - 특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발농업직불금 인상(100만원/ha) ▲농신보 제도 개선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1%로의 인하 등의 한농연의 요구사항이 FTA 대책은 물론 내년도 농업예산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정부는 한농연의 핵심 요구사항인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의 반대·저지에만 몰두하고 있음
 - 8월 1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발언을 하여 농업인들의 공분을 샀음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안이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억지 결론을 유도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 모금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적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 게다가 정부와 재계 등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계기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과의 FTA 조기 비준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심히 우려됨
 - 10월 중 가동될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철저한 피해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경제계, 보수언론의 주도로 “FTA 선점 효과

가 사라진다, 일본과의 무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허울뿐인 정부 대책만으로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임

-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의 거대 FTA까지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FTA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 변화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식량 문제, 세계 경제 위기, 남북통일 등의 다양한 돌발 변수들을 감안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미래 후계농업인력이 원활히 유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농업·농촌 대책의 수립·추진이 절실한 때임
- 그럼에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FTA 대책들은 국가별 FTA에 대응한 품목별 피해 대책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실망이 큼
-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예산·통상 부처의 눈치만 보며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WTO 체제 21년, FTA 시대 11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백년지계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함

2. FTA 농업 부문 피해대책 관련 한농연의 요구사항

1)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1%를 ‘(가칭)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함으로써 ▲농림수산분야 R&D 지원 ▲영세소농의 운영·생활자금 혹은 담보력이 부족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소액 창업자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사회적기업 육성기금’ 등으로 활용해야 함
- 농축산물 수입 관세 중 50%를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해야 함

2)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함

3)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를 ‘3개년 평균가격의 95%’로 바꾸고, 보전비율도 상향 조정(90% → 100%)해야 함

4)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및 밭기반 정비

- 모든 밭작물에 대한 보상 단가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해야 함
- 밭 기반 정비,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

- 현재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포함)에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보증 제도(현행 2천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10% 적용)를 완전히 폐지해야 함
- 2005년 도입되었던 동일경영체 보증 금지 조치(공동경영하는 가족의 보증한도를 합산)를 폐지해야 함
- 농업인에 대한 위탁보증(농신보 지역별 보증센터 대신 금융기관에 위탁) 한도 확대를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현행 2억원)를 확대해야 함

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한도 확대 등 농업인력육성정책 개선

- 귀농·귀촌 정책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전업 농업인 중심의 지원·관리 체계로 정비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지원 한도 증액 ▲거치·상환기간 연장(최장 20년)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신규,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농지(논, 밭, 초지),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무료 혹은 저가에 중장기 임대(최장 10년 이상)해 주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영농 정착과 생산비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임 정 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들어가며

- 한중 FTA는 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초민감품목이 확보되어 실질적 개방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실제 협상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지금까지 추진된 FTA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 보면 관세가 낮아지는 혜택이 수입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글로벌 수입업자의 판매 활동 강도가 급격히 높아져 결과적으로 관세감축이 크지 않더라도 수입수산물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개방폭을 최소화하여 우려했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만큼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확대, 수산업 어촌 부분에서의 공동투자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이익을 국민경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더 이상 기존 FTA 대책처럼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어가에 대한 피해보상 중심의 민원성 대책에 급급하다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음
- 따라서 한중FTA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한중 FTA로 인한 대책만 수립해서는 안되며, TPP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고 그 속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함

□ 보완대책 분석

- 현장 어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신보 개선 등 수산금융 대책 세부추진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의 내용 제시
- 모든 생산 업종에서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영세한 어업인의 대부

분이 종사하는 연안 어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등이 기존에 추진 중인 과제이며 새로운 내용과 구체적인 예산규모 제시되지 않음

-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와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대책의 예산규모와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통상·예산 당국의 미봉책에 불과
- 이미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통해 수산업을 완전 개방한 상황에서 TPP와 RCEP 같은 거대 FTA 추진에 대비한 종합적인 FTA대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

□ 정책과제

① 수산업 직접 피해보전 강화

-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필요
 -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 급증 및 어업경영비 증가로 수산물 가격 상승
 -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발동 요건 및 보전비율 90%→100% 적용

② 수산직불제 확대

- 수산분야는 직불제 미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14.10.15)
 -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피해보전, 폐업지원직불제의 3개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사실상 유일
-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 직불제 수(수산업 : 3개, 농업 : 9개) 3배
 - 농업직불제 금액 대비 1.34% 불과
 - 소득보전, 경영이양, 휴어 등에 대한 직불제 수요 다수 존재
- 기존 조건불리직불제 확대 추진 및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등 수산현실을 반영한 직불제 도입 및 확대

③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설치

-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수지는 적자 지속, 한중 FTA 발효시 피해 극대화가 예상되므로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해 어업인 지원기금 마련 필요

④ 정책자금 지원 개선

- 한중FTA 발효시 양국간 어업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자금 압박 해소 및 경영 지속성 확보
 - * 영어자금 금리인하(3%⇒1%) 및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3%⇒1%)
- 수산발전기금 자산규모 10,061억원('13년) ⇒ 3조원 이상 확대

⑤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 수산업계 외국인 인력 필수 요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통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에 기여
 -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제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일원화
 - * 수산업계는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이원화로 이탈 방지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되고 있음

⑥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 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 산지위판장의 위생품질관리형 경매장 건립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및 수산가공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소비지 인근 대규모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 확대
- 수산물 생산수출상품의 규격화·고품질화를 위한 R&D 투자
 - 수출형 영어협동조합 육성 및 성공모델 발굴·확산

⑦ 농신보 보증 확대 및 심사방법 개선

- 시설현대화사업 및 정책자금 용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증 확대 및 심사방법 개선 필요
 - *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심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가칭 농

어업금융공사)하여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⑧ 어업용유류 가격완충 자조금제도 도입

- 일정 수준이상 유가 상승시 상승분 일부 지원
 -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연동보조금 지원

* 평시 어업인 및 정부 1:1 각출, 자조금 조성 후 유가폭등 시 상승분 일부 보전

⑨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해결

- 한중간 외교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근본대책 마련
 -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양허수준으로는 미흡
 - FTA 발효시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 확대 예상

⑩ 위생검역 강화

- 수산물 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
 - 수산물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마련이 미흡

* 중국은 수산물 수출 1위의 국가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40%를 차지

■ 나가며

- 수산업은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산업
- 동시다발적 FTA 개방 효과로 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국민을 위해 좋은 수산식품이 수입되도록 하고 국내 수산물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입 관리 대책이 필요
- 특히 수산식품의 안전성 등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려하되 그것이 국내 수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가 목표가 수산업과 어촌경제의 희생을

담보하는 거대 경제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

한-중 FTA 실질적 피해 대책

윤 태 진
농해수 수석전문위원

한중FTA 실질적 피해 대책

□ 정부의 FTA 보완대책의 문제점 및 실질적 피해대책의 필요성

- 정부는 한미FTA 등 주요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피해액)을 총 28조 6,500억원(표1)으로 추정하였으며
- 한중FTA 피해대책으로 10년간 1,595억원, 한베FTA 대책으로 10년간 664억원, 한뉴FTA 대책으로 10년간 3,523억원 등 비준을 앞두고 내놓은 투융자계획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총 29조 9,782억원(표 1)의 피해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표2)와 같이 농업예산은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여 그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FTA 피해대책 29조 9,782억원이 “아랫돌 빼서윗돌 쌓기 식” 숫자놀이 정책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한중FTA로 인한 피해액이 20년간 고작 1,540억원의 생산 감소를 예측하여 졸속 피해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도 10년간 1,595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 작년 말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이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바 있어 정부의 피해분석 신뢰할 수 없음
- 또한, 정부의 분석자료에도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업생산액 누적 피해액이 10조 3,825억원(연평균 5,191억원)으로 예측하였음
 - 정부의 피해분석 자료를 신뢰한다하더라도 한중FTA 피해대책은 최소 10조 5,365억원 규모여야 할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표 3)과 같이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가구당 연간 168만원, 월 14만원 수준에 불과함
 -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비용으로

‘농어업예산을 모두 농어민에게 퍼준다’는 인식은 잘못임

- 따라서, 한중FTA 등 비준에 앞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 피해보전직
불제 개선 등 실질적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1) FTA별 피해대책 현황

FTA	정부 피해예측	정부 피해대책	여야정협의체 합의	비고
한칠레 FTA	10년간 5,860억원	7년간 1조2천억원	—	
한미 FTA	15년간 12조 6,683억원	10년간 24.1천억원	13개 대책	
한EU FTA	15년간 2조 3,000억원	10년간 2조원	4개 대책	
한호주, 한캐나다	15년간 2조 1,329억원	10년간 2.1조원	9개 대책	
한·중 FTA	20년간 1,540억원+10조 3,825억원 간접피해	10년간 1,595억원	미정	
한·베 FTA	15년간 705억원	10년간 664억원	미정	
한·뉴 FTA	15년간 3,558억원	10년간 3,523억원	미정	
계	28조 6,500억원	29조 9,782억 원		

※ 기 체결된 FTA 중 상기 7개를 제외한 한·아세안, 한·인도 FTA 등은 농어업에 큰
영향이 없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표 2)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비중

(단위 : 억원)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림수산물분야			농림수산물부		
	금액	증가 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2,789	6.8	5.9
'07	2,384,000	6.4	155,815	5.5	6.5	135,539	2.1	5.7
'08	2,572,000	7.9	159,821	2.6	6.2	139,549	3.0	5.4
'09	2,845,000	10.6	168,745	5.6	5.9	146,363	4.9	5.1
'10	2,928,000	2.9	172,730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6	176,51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7	5.6	154,083	3.7	4.7
'13	3,420,000	5.3	183,862	1.2	5.4	154,118	0.0	4.5
						수산물 제외 135,268	△12.2	4.0
'14	3,558,000	4.0	187,334	1.9	5.3	136,371	0.8	3.8
'15	3,755,000	5.5	193,065	3.1	5.1	140,431	3.0	3.7
'16(안)	3,867,000	3.0	193,165	0.1	5.0	142,883	1.7	3.7

(표 3) 농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총괄)

(단위 : 억원, 천가구)

구분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	8년 평균
보조금 합계 (농업지출액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농가구 수 (천호)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51	1,151	1,179
가구당 보조금 수령액	173만원	172만원	133만원	181만원	210만원	137만원	167만원	176만원	168만원

료 : 농식품부

(표 3-1) 농업분야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보조금 내역	2007결 산	2008결 산	2009결 산	2010결 산	2011결 산	2012결 산	2013예 산	2014예 산	8년 평균
합계 (농업예산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쌀 고정직불금	7,120	7,118	6,328	6,223	6,174	6,101	6,984	6,880	6,616
쌀 변동직불금	4,370	2,791	-	5,945	7,501	-	252	1,050	2,739
조건불리직불금	306	310	307	9	715	414	386	386	354
친환경농업직불금	175	263	409	27	711	364	478	442	359
경관보전직불금	10	26	96	149	139	75	140	140	97
경영이양직불금	113	131	324	540	593	624	624	617	446
농어업재해보험 (축산공제 지원)	493	491	548	994	1,250	1,483 (423)	2,016 (422)	2,701 (529)	1,2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1	132	295	18	19	476	43	43	133
축산공제료지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	234	264	298	-	-	-	-	-	100
축산 자조금 지원	145	198	208	208	202	218	214	193	198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278	494	419	316	245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219
농촌보육여건개선	-	-	-	-	-	275	327	294	112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163	2,352	2,447	2,377	2,702	2,600	2,820	3,241	2,588
농어업인재해공제 지원	215	278	322	332	372	371	368	397	332
취약농가인력지원	39	58	60	65	65	63	71	76	62
농업자금 이차보전	5,561	5,879	3,886	4,066	3,730	2,410	3,783	3,213	4,066
발작물직불금	-	-	-	-	-	246	704	875	228

료 : 농식품부

□ 품목별 피해분석 및 대책

- 정부의 분석 자료를 신뢰한다하더라도 한중FTA,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 FTA 및 FTA이외 중국피해 합계액인 10조 9,628억 원(1,540억원+705억원

+3,558억원+10조 3,825억원) 규모의 실질적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자료를 근거로 품목별로 피해가 큰 작목을 분석한 결과 (표 3)와 같음

- 배추 등 채소류가 6조 1,289억원 생산 감소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인삼·참깨 등 특용·화훼가 4조 2,314억원 생산 감소, 축산이 4,168억원 생산 감소, 곡물 878억원 생산 감소, 과실 395억원 생산 감소, 목재류 308억원 생산 감소, 임산물 27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됨

○ 정부는 한중FTA 피해대책으로 1,595억원의 투융자, 한베트남FTA 피해대책으로 664억원 투융자, 한뉴질랜드FTA로 3,523억원 등 총 5,782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 이는, 그동안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농민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이므로 (표 4)의 피해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조 9,628억원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품목별 피해규모에 상응한 ‘품목별 피해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4) 3개 FTA 피해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한중 FTA (20년 누적)	한베트남 FTA (15년 누적)	한뉴 FTA (15년 누적)	FTA와 무관 대(對) 중국 피해	계
곡물	미곡		0.0	0.0	0.0	0.0	0.0
	맥류		-0.0	-0.0	0.0	-1.4	-1.4
	두류		-11.4	0.0	0.0	-60.6	-72.0
	잡곡		-0.7	-0.0	-0.0	-0.0	-0.7
	서류		-0.0	-0.7	-0.0	-13.1	-13.1
소계			-12.0	-0.7	-0.0	-75.1	-87.8
채소	엽근 류	배추	-8.3	-0.0	-0.0	-1,043.8	-1,052.1
		양배추	-0.4	-0.0	-0.0	-21.0	-21.4
		시금치	-0.6	-0.0	-0.0	-15.5	-16.1
		상추	-0.9	-0.0	-0.0	-222.6	-223.5
	구근 류	무	-1.7	-0.0	-0.0	-133.6	-135.3
		당근	-0.7	-0.0	-0.0	-824.6	-825.3
		마늘	-5.6	0.0	0.0	-1,312.8	-1,318.4
	양념 류	양파	-1.7	-0.0	0.0	-158.8	-160.5
		고추	-13.1	0.0	0.0	-1,413.1	-1,426.2
		파	-2	-0.0	-0.0	-360.3	-362.3
		생강	-0.2	-3.0	-0.0	-483.5	-486.7
	과채	수박	-0.7	-0.0	-0.1	-8.9	-9.7
		참외	-0.8	-0.0	-0.1	-9.3	-10.2

구분			한중 FTA (20년 누적)	한베트남 FTA (15년 누적)	한뉴 FTA (15년 누적)	FTA와 무관 대(對) 중국 피해	계
류	오이	-0.0	-0.0	-0.0	-18.4	-18.4	
	호박	-0.0	-0.0	-3.5	-8.7	-12.2	
	토마토	-4.7	-0.0	-0.2	-18.4	23.3	
	딸기	-1.6	-0.0	-0.7	-24.5	-26.8	
	풋고추	-	-0.0	-0.0	-	0.0	
	메론	-	-0.0	-0.0	-	0.0	
	가지	-	0.0	0.0	-	0.0	
소계			-43.0	-3.1	-5.0	-6,077.8	-6,128.9
과실	사과	-1.9	-0.1	-0.1	-6.9	-9.0	
	배	-0.6	-0.0	-0.0	-2.4	-3.0	
	포도	-0.9	-0.0	-0.0	-3.3	-4.2	
	복숭아	-0.2	-0.0	-0.0	-1.0	-1.2	
	감귤	-2.6	-0.1	-0.0	-6.5	-9.2	
	단감	-0.4	-0.0	-0.0	-1.3	-1.7	
	뽕은감	-0.5	-0.0	-0.0	-1.6	-2.1	
키위	-	0.0	-9.0	0.0	-9.0		
소계			-7.1	-0.3	-9.2	-22.9	-39.5
특용 ·기타	유지(참깨·들깨·땅콩)	-17.5	-0.0	-0.0	-465.0	-482.5	
	연초	-12.0	-0.0	-0.0	-14.0	-26.0	
	인삼	-0.0	-0.0	-0.0	-3,114.7	-3,114.7	
	화훼	0.0	0.0	-0.1	-246.9	-247.0	
	버섯	-0.3	0.0	0.0	-150.9	-151.2	
	차	0.0	-0.0	0.0	-34.1	-34.1	
	약용	-0.0	-0.0	0.0	-175.8	-175.8	
소계			-29.8	-0.0	-0.1	-4,201.5	-4,231.4
축산	한육우	0.0	0.0	-125.7	0.0	-125.7	
	낙농	0.0	0.0	-164.2	0.0	-164.2	
	돼지	0.0	0.0	-32.5	0.0	-32.5	
	육계	0.0	0.0	-17.1	0.0	-17.1	
	산란계(계란)	0.0	0.0	0.0	0.0	0.0	
	오리	0.0	0.0	-2.1	0.0	-2.1	
	벌꿀	0.0	-66.3	0	-0.8	-67.1	
기타	-3.8	0.0	0.0	-4.4	-8.2		
소계			-3.8	-66.3	-341.6	-5.1	-416.8
목재류	목재펠릿	-0.1	-	-	-	-0.1	
	성형목탄 등	-0.2	-	-	-	-0.2	
	제재목	-3.4	-	-	-	-3.4	
	단판	-0.9	-	-	-	-0.9	
	파티클보드	-0.1	-	-	-	-0.1	
	합판	-3.4	-	-	-	-3.4	
	목제틀	-1.0	-	-	-	-1.0	
	기타목재류	-5.8	-	-	-	-5.8	
	건축용목제품	-4.0	-	-	-	-4.0	
	목제식탁용품	-5.6	-	-	-	-5.6	
	목제장식품상자	-2.7	-	-	-	-2.7	
	생활목재류	-3.6	-	-	-	-3.6	

구분		한중 FTA (20년 누적)	한베트남 FTA (15년 누적)	한뉴 FTA (15년 누적)	FTA와 무관 대(對) 중국 피해	계
소계		-30.8	0.0	0.0	00	-30.8
단기소득임 산물	송이버섯(냉동)	-2.0	-	-	-	-2.0
	고사리(건조)	-8.5	-	-	-	-8.5
	죽순	-0.9	-	-	-	-0.9
	도라지(신선/냉장)	-0.1	-	-	-	-0.1
	초파(신선)	-0.0	-	-	-	-0.0
	대(청환죽)	-0.0	-	-	-	-0.0
	대(기타죽)	-0.2	-	-	-	-0.2
	참뿌리(기타)	-0.3	-	-	-	-0.3
	목이버섯(아우리쿨라 리아/건조)	-6.0	-	-	-	-6.0
	산식물기타(뿌리없는 삼수, 접수)	-0.3	-	-	-	-0.3
	이끼와 지의(신선)	-0.0	-	-	-	-0.0
	도토리	-0.7	-	-	-	-0.7
	도토리분	-0.2	-	-	-	-0.2
	생칠	-0.0	-	-	-	-0.0
	기타산림수기타	-5.9	-	-	-	-5.9
	락검기타	-0.0	-	-	-	-0.0
	새의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2.1	-	-	-	-2.1
소계		-27.4	0.0	0.0	00	-27.4
총계		-154.0	-70.5	-355.8	-10,382.5	-10,962.8

※ 자료 : 농식품부('15.6.30.)

□ 실질적 피해대책

1.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실질적 피해대책

○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 가칭 「FTA 무역세」를 신설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에 일정세율 부과, 징수된 세금은 「FTA 무역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산업 지원 사업에 사용⇒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기존 「농어촌특별세」 징수범위를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로 확대하여 징수하는 방안¹⁾

1) 유성엽의원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1천억 이상인 법인(약 230개)에 대하여 법인세액(약 21조원)의 100분의 10을 징수(2조1천억)

※ 김승남의원, 홍문표의원 대표발의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계류 중 (협정이행이익금 부과, 방법 부령으로 정함)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및 지연사유
농어촌특별세법 (개)	유성엽 (‘1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무역이득공유제법 •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농어촌특별회계로 관리하여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 발전을 위해 사용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이 FTA 수혜산업·업체 선별 곤란, FTA로 인한 이익 계량화 및 부과방법 곤란 등으로 반대하므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의 •정부 반대 ※총선공약 •정부 반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법 (개)	김승남 (‘15.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무역이득공유제법 • FTA 이행에 따라 순이익 발생 산업의 종사자에게 순이익의 범위에서 ‘협정이행이익금’을 부과·징수 • 징수된 협정이행이익금은 FTA이행지원기금 및 농안기금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의 •정부 반대 ※총선공약 •정부, FTA 수혜산업·업체 선별 곤란, FTA로 인한 이익 계량화 및 부과방법 곤란 등으로 반대

○ FTA피해보전직불제 기준 완화

- 발동기준(90%→100%), 지급기준(피해액의 90%→100%)
- 주요 FTA 농업 피해액은 총 26조 5,276억 원, 그러나 ‘FTA피해보전직불제’는 2013년에야 처음 발동하였고 고작 578억 원이 지급된 실정,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필요

※ 황주홍의원(95, 100), 김승남의원(100, 100), 유성엽의원(100, 100, 물가지수 적용, 수입기여도 제외)이 각각 대표발의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계류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및 지연사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	황주홍 (‘13.7.16) 김승남 (‘15.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FTA 등 여러나라와 FTA체결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나 지급요건은 까다로워 지급요건 완화 •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10년→15년 • 작동기준을 기준가격의 90%→100% • 지급금액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의 90%→100%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소위 •정부 반대 ※한중FTA 대책 •정부여당, 잦은 작동으로 행정비용 과다 및 지급액 과다 발생 우려로 반대

○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 논을 비롯한 농지의 생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지원 등은 전무한 실정으로 농지의 소유를 통하여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하여 생태보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보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초석마련 후 점진적으로 확대(단가인상) 추진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²⁾ 계류 중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및 지연사유
농지법(개)	이개호 (‘14.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소유를 통하여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하여 생태보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보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소위 • 정부 반대 ※충선공약 • 정부여당, 유사한 직불금이 존재하고, 비용과 다 우려로 반대

○ 농업정책자금,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현재 1%~2.5%인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시 약 연1,600억원 소요

○ 밭농업직불금 100만원/ha으로 인상

- 현재 25만원/ha, 26개 품목 : 40만원/ha, 논 이모작 : 50만원/ha

* ‘16년 예산안 163,077백만원

○ 밭농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10년간 매년 2,000억원 예산 투입

- 중국농산물 수입피해 99%가 밭작물에 집중, 밭농업 기반정비 미흡, 밭농업 기계화율(54%) 미흡, 밭농업 경쟁력강화 위한 R&D투자 매우 열악(농진청 연구개발예산은 전체 R&D예산의 1%수준)
- ‘밭작물주산지 정비사업’은 지특회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우선배정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매우 부진하므로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 예산집행)

2) 농지법개정안 :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생태보전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지급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업의 가업승계 상속세 한도 대폭 증액

○ 중장기 농업대책 특별법 제정

– 대통령직속의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포함

○ 농사용전기 확대(RPC, APC, 축산 TMR기계 등)

○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 4년 유예(한호주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불이행)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및 지연사유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 ※ 환노위 소관	황주홍 (‘15.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의 질소·인 회수방법, 가축분뇨연료화 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 한-호주·캐나다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인 무허 가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노위 환노위에서 여당반대 로 처리 우선순위 지연 <p>※한호주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p>

2. 한국농축산연합회의 10개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

요구내용	현행	실행방법	개선 시 소요예산	비고
1.농업 정책 자금 대출 금리 1%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정책자금 금리대별 현황(‘15.8) -전체 24조 5709억원 중 0~1% 10.6%, 1~2% 32.9%, 2~3%, 47.3%, 3%이상 9.3%로 분포(7.23 당정협의 결과 반영 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인하에 따른 추가 소요액 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대상 자금을 1%로 금리인하시 소요예산 추정 :약 160,823백만원 	
2.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농어민 등 지원법’ 제정 또는 ‘농특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업의원(안)은 연 2.1조원 징수(소요예산 없음) 	

요구내용	현행	실행방법	개선 시 소요예산	비고
			• 김승남의원(안) 은 추산 불가	
3.발농업직불금 100만원 / ha로 인상 및 각종 직불제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고정직불금 : 25만원/ha - 26개 품목 : 40만원/ha - 논 이모작 : 50만원/ha * '16년 예산안 163,077백만원	• 예산 반영	• 308,991백만원 추가 소요 (총 472,068백만원)	
4.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 100% 현실화	• 보전비율 90%	• 「FTA 농어업법」 개정	• '14년 실제 지급액과 비교 시 34억원 추가 소요 예상	'14년 발동 품목(수수, 감자, 고구마, 송아지)
5.일몰 농업세제 기한 연장 및 가업승계 상속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세법 개정안에 농업용 면세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등 농업분야 일몰 연장·신규 건의 사항이 다수 반영 •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15년 개정안) 5억원 → 15억원 	•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지원 * '15년 일몰종료 조항 연장 시 약 53,181억원 지원 효과(소요예산 없음) ※'13년도 실적 	-
6. 발 기반정비 체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4년에 시작한 발기반정비 사업을 '10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중이나, 시·도별 예산한도 제약으로 사업물량 축소, 정비수준 저하 등 문제 발생 	기계화촉진 등 발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국적 관점에서 정부 계획하에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지원체계 개선(지자체→중앙주도), 사업규모 확대 방안 등을 기재부와 협의중	발작물이 집단·규모화된 주산지 10만ha에 대한 지역 맞춤형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총 4조원 규모 소요 * '16예산안 : (요구) 1,000ha 시범사업비 120억원 → (반영) 타당성조사비 5억원	
7.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고·농대생·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후계농·우수 후계농 선정·지원, 후계농·농업법인 경영컨설팅 등 지원 	농업교육 체계를 현장·실습 중심으로 개편*, 품목전문교육 확대 * (가칭)창조농업선도고교 지정, 농대 영농창업특별과정 지원, 주산지 품목대학 운	34,325백만원	

요구내용	현행	실행방법	개선 시 소요예산	비고
8.농신보 담 보제도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2부터 사업성 평가모형을 개발 운용 중 - 현행 최대 3억원 까지 추가보증 가능 	<p>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평가 모 형의 확대적용 을 위한 시스 템 리모델링 및 농신보 심 의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3억원 	농신보 기 금 사업비
9. 농식품 가 공·제조 시 설에 농사 용 전기요금 적용 및 요금인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 건조·저장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 장·가공시설,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RPC도정시설 등 가공·제 조시 설은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도축장은 10년간 (‘15.1~’24.12) 전 기요금 20%인하 	<p>○ 한전 전기공급 약관 개정(산자 부 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시 절감액 (‘14년기준 추정) • 도축장 : 440억원 • RPC도정 : 125억원 <p>※ ‘14년 농사용 전력 평균판매 단가 47.3원으로 계산(한전)</p>	
10.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축산업 상 생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대한상의 에 농식품상생협력추 진본부 설치 (‘14.9.15) 및 식품기 업과 농업계와의 상 생 MOU체결 유도 (30건) 중 - 확산을 위한 컨설팅, 경영자문 및 설명회, 경연대회 등 추진 • (농식품수출) 수출농 가·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해외 마케 팅까지 맞춤형 지원 중 <p>*‘15년 예산 : 5,867억원(보 조 1011, 용자 4,8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다양 한 상생협력 사례 발굴·확산추진 및 인센 티브 제공 지자체 참 여확산 방안 등 제도 화 방안 마련 추진 - 지자체 참여확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15.5~12월) • (농식품수출) 해 외시장 정보조사 강 화 검역·통관 등 수 출이민해수, 해외 물류체 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수출인프라강화사업 (‘15년 360억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16 년 신규예산 4 억원 반영 • (농식품수출) 10년 간 60억원 투자 <p>*한-중, 한-베 FTA 대책에 기 반영</p>	

3. 축산단체협의회 요구사항

요구내용	현행	실행방법	개선 시 소요예산	비 고
1. AI, FMD 종합 근본	①AI, FMD 등 질병발생 때마 다 전문인력부족으로 어려움	• 시군별 방역담당 공무원 총원 및		

대책 수립	경유	전문교육 실시		
	②가축 매몰지 관리부실: - 매몰지 조사는 농식품부, 매몰지 관리는 환경부 소관으로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등과 공조, 관리 · 친환경적인 가축 매몰지 관리 방안 마련 · 호기호열성 미생물 등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 강구 		
	③가축 질병 발생 때 살처분 보상금 삭감 : - 최소 20%~최대 80% 삭감 - 신고 기피 현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발생농가 중 백신접종 및 차단 방역을 실시한 농가에 한하여 100% 보상 		
	④살처분 비용, 농가 전가 - 일부 지자체에서 살처분 소요비용을 농가로 전가, 이중 손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개정하여 농가 손실부담 완화 조치 필요 		
2. 국회 여야정 협의체 (2014.11.13) 합의내용 이행	①축산환경규제 개선 (무허가축사)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는 <u>‘이동통로’,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와 ‘축사처마를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퇴비사벽역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u> 가설건축물로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부처간 재협의를 통해 ‘축사간 지붕연결’, ‘축사처마연장’ ‘벽면콘크리트 허용 (퇴비사)’ 등 가설건축물로 인정 		

4. 한국낙농육우협회 6개 요구사항

- ① 청소년의 고른 성장, 우유소비 기반확충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을 위한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 한·호주, 한·캐나다 FTA 축산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사항('14.11.13)
 - 유업체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
 - 정부개입을 통한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낙농진흥법 개정 등)
 - *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행에 따라, 유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해 정부기준단가(430원/ml)에 크게 못 미치는 300원대에 공급하는 사례 빈번 발생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양분 공급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
 - (대상자 확대) 중·고등학교 학생 중 차상위 그룹(99천명)
 - (예산증액) 10,642백만원(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현행) : 저소득층 학생, 초등학교 학생 차상위그룹
- ② 국산 우유원료 사용 유제품 확대를 위한 K-MILK(국산우유사용인증제) 활성화 지원
 - (참여업체 지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참여유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연간 100억원), 참여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금리 1%, 연간 100억원)
 - * 자사제품 중 K-MILK 인증제품 마케팅(광고 등)에 인증마크 활용 시 지원 등
- ③ 낙농체험 교육(학생 등), 교육목장 육성 등 위한 낙농교육홍보관 건립 지원
 - (활용계획) 낙농교육사업 관련 지정교육장(교사·학생, 소비자, 농가), 소비자 체험·홍보(지역경제 활성화)
 - * 부지선정 : 중부권(경기권)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부지제공 협조)
 - (지원내용) 교육홍보관* 설치(25,000백만원) 및 운영비(11,000백만원) 국고 지원
 - * 교육홍보관 건물, 낙농자연학습장, 주차장, 조경시설, 친환경 발전시설(태양광) 등

④ 적체분유 해소 및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분유 지원

○ (분유지원) 10,000톤, 소요예산 300억원(3,000원/Kg)

○ (조달재원) 남북협력기금, 축산발전기금

* 대북 물자지원으로 상시적 우유 지원체계 수립

수 근로자 건강증진,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체 단체 우유급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전경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업체 단체 우유급식 실시방안 마련 및 시행(공기관·공기업부터 시범실시)

* 한국농축산연합회·경제4단체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MOU체결('14.11.13)

⑥ 낙농 특성을 반영한 피해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 (현행) 원유가격 기준 → (개선) 생산량 또는 쿼터 기준

*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원유가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FTA로 인해 쿼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낙농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 분	상대국	추진 상황	'14 농산물수입 ¹⁾	
			수입액 (백만불)	비중 (%)
발효 및 타결	칠레	○ '99.12. 협상개시→ '04.4. 발효	278	1.4
	싱가포르 ^②	○ '04. 1. 협상개시→ '06.3. 발효	115	0.6
	EFTA	○ '05. 1. 협상개시→ '06.9. 발효	56	0.3
	아세안	○ '05. 2. 협상개시→ '07.6. 발효	2,901	15.0
	인도	○ '06. 3. 협상개시→ '10.1. 발효	636	3.3
	EU	○ '07. 5. 협상개시→ '11.7. 발효	1,741	9.0
	페루	○ '09. 3. 협상개시→ '11.8. 발효	77	0.4
	미국	○ '06. 6. 협상개시→ '12.3.15 발효	5,066	26.2
	터키	○ '10. 4. 협상개시→ '13.5.1 발효	37	0.2
	콜롬비아	○ '09.12. 협상개시, '12.6.25 실질타결, '13.2.21 서명완료 ○ '14.4.29. 국회비준 동의	93	0.5
	호주	○ '09. 5. 협상개시, 7차례 협상, '13.12.4 실질 타결 선언 ○ '14.4.8. 정식서명, '14.12.2 국회비준 동의, '14.12.12. 발효	1,317	6.8
	캐나다	○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14.3.11 실질 타결 ○ '14.9.22. 정식서명, '14.12.2 국회비준 동의, '15.1.1. 발효	358	1.9
	중국	○ 공동연구('05.~'10.5), '12.5.2. 협상개시 선언 14차례 협상 ○ '14.11.10 실질 타결, '15.2.25 가서명, '15.6.1 정식서명	2,659	13.8
	뉴질랜드	○ '09.6. 협상개시, '14.10.15~17 제9차 협상, '14.11.15 타결 선언 ○ '15.3.23. 정식서명	109	0.6
	베트남 ^②	○ 공동연구('10.6~'11.10), '12.8.6. 협상개시, 제9차 협상, '14.12.10 실질 타결 ○ '15.3.28. 가서명, '15.5.5. 정식서명	404	2.1
소 계		15건 52개국	15,328	79.4
협상 중	RCEP	○ '12.11.20 협상개시 6차례 공식협상 ○ 1차 '13.5.9~13 2차 '9.23~27, 3차 '14.1.20~24, 4차 '14.3.31~44 5차 '14.6.21~27, 6차 '14.12.1~5, 7 차 '15.2.9~13	7,899	40.9
	한·중·일 ^②	○ '12.11.20 협상개시, 6차례 공식협상 ○ 1차 '13.3.26~28, 2차 '7.30~8.2, 3차 '11.26~29, 4차 '14.3.4~7, 5차 '14.9.1~5, 6차 '14.11.24~28	2,937	15.2
	인도네시아 ^②	○ 공동연구(1~3차, '11.7.9,10월), '12.3.28. 협상개시 선 언 ○ 1차-'12.7.11~12, 6차-'13.11.4~8, 7차-'14.2.25~28	577	3.0
	재개 준비 중 (3건)	○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39	0.2
	일본	○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10차례 개최('08.6~'12.6)	278	1.4
	GCC	○ '08.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9	0.1
	소 계	6건 22개국	7,948	41.2
준비 중	TPP		8,848	45.8
	MERCOSUR	○ 민간공동연구('05.5~'06.11)	2,093	10.8
	기 타	○ 말레이시아 ^② ,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에콰도르	1,102	5.7
	소 계	9건, 31개국	11,238	58.2
합 계		29건 79개국(중복국가 제외)	18,342	95.0
농산물 전체			19,304	100

1) 우리나라 전체상품 수입액 : 525,515백만불, 2) 국가수 및 수입액(비중)은 중복 미포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8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RCEP(역내포괄적 경제파트너십 16개국;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② : 우리나라와 FTA를 중복 체결한 국가를 나타냄

메 모 장

.....
메 모 장
.....

메 모 장